



즉시 사용

| | | | |
|----|--|---|---|
| 비고 | 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복지부, 행안부 | | |
| 담당 | <총괄>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| 과장 이동훈, 서기관 이경수 (044-200-2056, 2057) | |
| |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|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팀 팀장 류동희, 사무관 신인철 (044-200-2664, 2665) | |
| |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|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실 | 과장 백승일, 사무관 조성원 (044-200-2290, 2291) |
| | | 복지부 복지정책과 | 과장 배금주, 서기관 이승현 (044-202-3020, 3009) |
| | | 국조실 안전환경정책관실 | 과장 정은영, 서기관 박용주 (044-200-2341, 2343) |
| | |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 | 과장 최병진, 사무관 신영섭 (044-205-5230, 5231) |
| |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응방안 |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| 과장 윤현주, 사무관 김형관 (044-200-2211, 2227) |
| | | 외교부 중동1과 | 과장 윤영기, 서기관 한우용 (02-2100-7480, 7481) |
| | | 산업부 미주통상과 | 과장 김장희, 사무관 조진화 (044-203-5650, 5651) |

수소차, 드론 등 신산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 걷어내겠습니다.

<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>

- ▶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 해소
- ▶ 수소차·전기차, 드론 등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·개선

<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>

- ▶ 중증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정, 1인 가구·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·지원
- ▶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(2,329개), 올해 연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우선 실시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서울↔세종 영상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

* (참석) 과기정통부·국방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고용부·국토부·해수부·중기부 장관, 국조실장, 금융위원장, 기재부1·교육부·외교부2 차관,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, 법제처·식약처장, 소방청·기상청·통계청장 등

-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」과 「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」, 그리고 「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및 대응방안」을 심의했습니다.

◆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(국무조정실)

-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‘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’(17.9.7.)에 따라 ‘미래 신산업 규제혁신’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-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, 드론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총 94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,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(총 39회)을 거쳐 82건의 애로를 해소*했습니다. (붙임 1 참조)

* 94건 검토결과 : 수용(42건, 45%), 대안마련(32건, 34%), 기조치(8건, 8%)

- 나머지 12건(13%)은 국민생명·안전 위해 우려 등으로 규제준치 인정

- 친환경차의 경우, 지난 8월 수소차·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(미래자동차)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, 민관 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, 15건을 해결했습니다.

- 향후에도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·혁파해 나감은 물론, 수소차·전기차에 대한 ‘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’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.

- 드론 분야는 드론업계 간담회, 현장방문 등 총 5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과제 12건을 발굴, 10건을 해소했습니다.

-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현장애로 혁파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친환경차 (전기차, 수소차)

-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,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합니다.

【과제①】 **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여,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.** - **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** -

애로 준주거·상업지역 내는 설치 불가(일반주거, 공업지역 등 가능) → 충전 불편

개선 준주거·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('18.11.15. 입법예고)

* 조례로 설치 허용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, 시·군)

☞ **(효과)**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

* 기존 LPG충전소·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조사 결과, 준주거·상업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('18.9월말 기준,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)

【과제②】 **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하여,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합니다.**

- **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** -

애로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·기준 차이로 이중개발 부담

* 국내 9종, 북미 15종, 유럽 13종 등

개선 국제기준 심층 분석 및 내압용기·자동차·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('19.12월)

* 국제기준 및 각국 고유기준 분석 후 개선안 마련('19.上) → 업계 의견수렴('19.8.) → 행정예고(60일, FTA 규정) → 규제·법제심사 등 고시 개정('19.12.)

☞ **(효과)** 해외기준과 국내기준 차이에 따른 이중개발 부담 완화

【과제③】 **압축수소(기체) 운송 시 대용량 용기 사용이 가능해져,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.**

- **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** -

애로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되었음에도 충전압력·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 → 사업성 저하

개선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최고충전압력(35→45Mpa) 및 내용적(150→360L) 상향 ('19.3월)

☞ **(효과)** 1회 운송 가능한 수소량이 약 2.5배 증대* → 충전소의 운송비 부담 완화

* 튜브트레일러(용기 10개 묶음) 1대 운송량 : (개선 전) 200kg/회 → (개선 후) 500kg/회

② 드론

- 업체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환경을 조성하고, 드론 활용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.

【과제①】 업체들이 집중된 대전 지역내에서 자유롭게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합니다.

-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(대전)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-

애로 대전은 원전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에 애로

개선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(대전시 문평동 인근)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추진 ('19.3월)

* 우선 비행관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('18.12.~'19.2.)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 (비행승인 불필요) 지정 추진

☞ **(효과)** 비행 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했던 불편 해소, 연구개발 단계 제품을 즉시 테스트 할 수 있어 드론 개발 활성화 촉진

* 대전에 드론 제조업체(29개), 항우연·KAIST 등 연구기관 위치

【과제②】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하여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이 편리해집니다. -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 정비 -

애로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

*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→ 고층건물(150m이상)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드론비행시 비행승인 필요

개선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 ('18.11월)

☞ **(효과)** 고층건물 화재점검, 시설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비행 편리성 제고

【과제③】 드론 활용도가 가장 높은 드론 촬영업체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촬영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(7일→4일)했습니다. - 드론 항공촬영 사전 승인처리기간 단축 -

애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에 7일 소요

개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기간 단축(4일 이내) ('18.8.1.우선시행, '18.12월 규정 개정)

☞ **(효과)** 영상, 측량, 탐사, 안전진단 등 드론 촬영업체*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

* '18.9월말 기준 드론 활용 사업체는 2,070개, 이 중 촬영업체는 1,679개(81%)

③ 주요 신산업

- 신서비스, 신의료기기, VR(가상현실) 등 신산업 활성화, 신시장 진입 촉진,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합니다.

【과제①】 자동차 공공 DB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종 정보를 혼유 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- 국가관리 자동차 DB 정보 중 유종 정보 공개 -

애로 차량등록증 정보(차종번호, 유종 등) 비공개로 혼유 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 불가

개선 혼유 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('19.3월)

☞ **(효과)** 국가 DB 활용으로 신비즈니스 창업 및 혼유사고 예방

- * 혼유사고 보험금 청구 현황('13.1.1~'16.4.30.) : 7,423건, 273억원
- * 주유소 현황 : 전국 약 12천여개('18.8월 기준, 오피넷)

【과제②】 제품설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을 최대화하고 단계적 시행 대신 일괄 시행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.

-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-

애로 인터넷 제공*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가 모호(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), 의료기기 등급별 연차적 시행**으로 개선효과 체감도 저하 우려

- * 현재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는 종이, CD, 안내서 등으로 제공 필요 → 인터넷만으로 단독 제공 허용방안 마련 과정에서 제기
- * 4등급('19.1월) ~ 1등급('22.1월)

개선 인터넷만으로도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 최대화 및 등급별 차등없이 일괄 시행('19.7월)

☞ **(효과)** 의료기기 제품설명서(종이, CD, 안내서 등) 제작 비용 및 관리 인력 절감*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(약 1,360~5,440억원)

- * 적용대상 제품량 약 136억 개 추정('17년도 생산·수입기준), 제품설명서 제작비용 개당 약 100~400원
- ** 최소 유통단위 10개로 가정 시 절감비용은 13.6억X(100~400원)=1,360억~5,440억원

【과제③】 VR 테마파크 일부에 VR 게임시설 설치 시 차단벽 설치를 면제해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VR 체험이 가능해집니다.

- VR테마파크 내 공간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

애로 VR 테마파크 조성 시 VR 체험기구(유원시설업)와 PC기반 VR게임(청소년게임제공업 등) 공간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 설치 필요 → 공간 활용에 제약

개선 유원시설업 일부에 PC기반 VR게임(청소년게임제공업 등)이 입점할 경우 영업장간 차단벽 등 설치 제외('19.6월)

☞ **(효과)** 한 공간에서 VR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공간 연출 가능 → 이용자의 흥미유발 및 VR 테마파크 활성화 촉진

- 한편,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현장애로 과제 89건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 61건(기초치 과제 28건 제외) 이행점검 결과,
 - 총 48건(79%)은 조치완료(46건)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(2건)했습니다. (붙임 2 참조, '18.11.13. 기준)

□ 이미 시행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【과제①】 안전인증을 받은 협동작업장에서 인간과 협동로봇의 영역 구분 없이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-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허용 -

- ◇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불가 → 공동작업 허용
(위험기계·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, '17.10.27.시행, '18.6월 안전인증기준 마련)

☞ **(효과) 협동로봇 확산을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여**

- * 안전인증 현황: 엔진부품조립 공장 1개사에서 협동로봇 1대 안전인증 획득('18.6월), 추가로 2대 인증 심사 중
- * '19년 상반기 20여대 인증 신청 예상(현재 다수업체와 안전인증 상담 진행 중)

【과제②】 고 해상도(25cm급) 항공사진 공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, 다양한 공간정보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 - 25cm급 고 해상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-

- ◇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일부 지역만 공개 → 전국으로 확대
(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, '17.12.28.시행)

☞ **(효과) 측량·지도제작, 도시설계 등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**

- * 제공실적 : '18.1~9월 62,487건 제공(전년 동기 대비 50.3% ↑)

-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에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,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
 -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, 현장의 개선수요에 기반한 규제개선 핵심테마*를 선정하여 시급한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·혁파해 나가겠습니다.

* (예시) 친환경차(2차 개선), IoT, 3D 프린팅,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

◆ 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 (관계부처 합동)

- 정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·지원하고,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·집중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-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겨울철 민생대책 :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(복지부)

- (복지 사각지대 발굴) 중증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정, 1인 가구 및 위기아동 등을 대상으로 3개월('18.11.19~'19.2.28)간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할 예정입니다.
 - 특히 최근 제도변화에 따라 보호가능성이 커진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
 - '(가칭)명예사회복지공무원, ' 지역사회복지관,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지역 인적망과 협력하여,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 찾을 예정입니다.
- (생활안정 지원) 내년부터 대도시에서 1억 8천만원의 재산이 있어도 긴급한 경우 생계비, 연료비,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- (기초생활) 또한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분들과, 만 30세 미만 한부모, 시설보호 종료아동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가 완화됩니다.
 - 이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가구에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
 - (에너지비용 경감) 추운 겨울철,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등 요금감면 대상가구에 대해 감면 일괄신청을 독려하겠습니다.
 - 특히 내년에는 중증·희귀난치성질환자들도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고, 평균지원단가도 10만2천원으로 인상되어 총 60만 가구에 612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한편 시범사업 형태로, 취약계층 거주주택 단열상태를 진단한 후, 필요에 따라 창호틈메우기, 단열에어캡 부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(19. 총 1,200가구).

- (돌봄 강화) 독거노인, 노숙인, 쪽방촌 거주자 등 겨울철 위기상황에 쉽게 처할 수 있는 분들이 건강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폭설,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급파해 일일안전을 확인하고, 노숙인 대상 응급잠자리, 의료 등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. 경로당에도 월 32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됩니다.
-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저체온증, 동상 등 한랭질환을 감시하고, 겨울철 특히 유의해야 할 고혈압 등 건강관리를 독려하겠습니다.
- 만 65세 이상 어르신 뿐만 아니라 생후 6개월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.
- (민관협력) '희망 2019 나눔캠페인('18.11.20-'19.1.31)', 설맞이 집중 자원 봉사기간 운영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민간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.

② 겨울철 안전대책 (행정안전부)

- 정부는 겨울철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까지 대상별·시기별로 집중 점검·관리기로 했습니다.
- (대설)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 대응을 실시하고 재난영상정보(CCTV 25만대)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.
- 제설 취약구간(1,288개소)을 선정 기준에 따라 등급화(3단계)하여 제설 전담차량 배치, 안전시설 설치, 우선 제설 등 특별 관리하고,
- 고갯길, 나들목(IC) 구간 등 상습 교통마비 구간(38개 노선, 43.4km)에 대해서는 자동제설장치를 추가 설치(특교세 100억원)할 계획입니다.

□ (한파) 올해부터는 '한파'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'한파 종합 대책'도 마련했습니다.

- 관계부처·지자체가 참여하는 '한파 대응 T/F'를 운영(11. 15. ~다음해 3. 15.)하고, 철도 등 교통운송, 농작물·영농시설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포함하는 「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」을 제정·운용할 예정이며,
-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·운영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.
- 한파 특보 시 공무원, 마을이장 등 재난도우미가 마을·가두방송으로 한파 상황·행동요령을 전파(매일 2회 이상)하고,
-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(대설, 한파)에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을 고려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

* 노인 등 재난약자 배려, 지역공동체 중심 대처, 재난정보의 공유·확산 등

□ (화재예방)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'겨울철 소방안전대책기간'으로 정해서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- 화재발생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, 공사장, 전통시장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·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
- 비상구 불시점검을 통해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.
- 특히,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(2,329개소)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보하고,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며
- 국민과 함께하는 화재위험 3대 겨울난방용품* 안전사용 캠페인, 주택용 소방시설** 설치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* 전기히터·장판, 전기열선, 화목보일러 / ** 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기

- (지역축제) 지자체 개최 연말연시 해맞이축제, 타종행사 등에서 불꽃놀이, 풍등 날리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
 -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말연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특히,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경제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,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해 취약계층이 일하시면서 이 겨울을 넘기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.
 - 아울러,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매일 찾아다니면서 당부도 해드리고 주의도 환기해드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

◆ 미국의 대(對)이란 제재 예외 인정 및 대응방안 (관계부처 합동)

-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對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 - 앞으로도 정부는 예외국 인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긴밀히 추진하는 한편, 수출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□ 규제혁파 과제(82건)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무인이동체 분과 가. 무인기 (과제1~10) | | | | |
| 1 |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(대전)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(국토부) | <p>애로 대전은 원자력연구원 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에 애로</p> <p>대안 마련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(대전시 문평동 인근)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지정 추진</p> <p>* 우선 장기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관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화 추진</p> | 시범운영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| '19.3월 |
| 2 | 하천둔치 등에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명확화 (국토부) | <p>애로 하천구역 내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시설 설치근거 불명확</p> <p>수용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'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·시설'을 명시하여 법적근거 명확화</p> |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(고시) 개정 | '18.10월 완료 |
| 3 |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 정비 (국토부) | <p>애로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고도 150m 이내로만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</p> <p>*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→ 고층건물(150m이상)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드론비행시 비행승인 필요</p> <p>수용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</p> |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| '18.11월 |
| 4 |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처리기간 단축 (국방부) | <p>애로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에 7일 소요</p> <p>수용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기간 단축 (4일 이내)</p> | 우선시행 후 '관할공역 내 민간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서' 개정 | '18.12월 ※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('18.8월) |
| 5 |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업무 등 민원처리 절차 정비 (국토부) | <p>애로 장치신고 시 규정에 없는 서류 요구, 문자서비스 오류 등 '원스톱서비스'* 이용불편</p> <p>* 현재는 비행기, 헬리콥터 등 일반민원과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 중</p> <p>수용 불필요한 구비서류 항목삭제 및 문자서비스 즉시 조치('18.4월), 급증하는 장치신고 신속처리를 위해 인력충원 및 '드론비행정보시스템' 별도 구축('19.12월)</p> | 인력충원 시스템개선 | '19.6월 '19.12월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|---|---|--|---|
| 6 | 드론 자격기준 세분화 등 자격제도 정비 (국토부) | 애로 기체 중량별 세분화 없이 12kg 초과 사업용인 경우만 자격증 발급, 자격증취득 후 보수교육 부재 등 대안 마련 드론분류체계 개편*과 연계한 자격체계 개편, 보수교육·자격갱신제 도입 등 자격제도 개선 * 무게중심의 분류체계를 '저위험-규제완화, 고성능-안전관리' 의 위험도·성능기반으로 개편 |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* 부처 기발표 | '19.3월 |
| 7 |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내 비행방안 마련 (국토부) | 애로 서울·대전 도심, 관제권(비행장주변 반경 9.3km)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학교에서 초경량 교육용 드론(250g이하, 완구용급)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필요 → 드론교육 활성화 저해 대안 마련 완구·레저용(250g)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* 준수 시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 *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 불가, 고도 20m 이하·비행거리 50m 이하 등 |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* 부처 기발표 | '19.3월 |
| 8 | 농업용 드론 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(농식품부) | 애로 농업용 드론 검정인력 부족에 따른 검정처리 지연으로 신속한 시장진입에 애로 대안 마련 검정 인력보강을 통한 검정 처리기간 단축 및 권역별 국가드론비행시험장 설치 계획과 연계한 출장심사 제도 적극 운용 | 인력보강 및 출장검정 제도 강화 | '18.12월 |
| 9 |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비행 규제 완화 (국방부) | 애로 농업용 드론은 1~3m의 낮은 고도에서 살포함에도 잦은 비행허가 승인신청 등 절차의 어려움이 있음 대안 마련 현재 최대 1개월 단위 비행승인기간을 6개월로 기간 연장 추진 | 우선시행 후 '유엔사/연합사/ 주한미군사 규정 95-3' 개정 | '18.12월 ※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('18.8월) |
| 10 | 소형드론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은 판매업자의 시험성적서도 인정 (산업부) | 애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중인 리튬이차전지의 해외 제조자는 국내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무관심 기 조치 소형드론(완구)에 탑재되는 리튬이차 전지의 안전성을 리튬이차전지의 성적서 등으로 같음('17.8월) → 판매업자도 시험 성적서 획득 가능 | 공통 안전기준 개정 | '17.8월 완료 |
| 2. ICT융합 분과 가. 가상현실(VR) (과제 11~16) | | | | |
| 11 |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(문체부,소방청) | 애로 VR테마파크 조성 시 VR체험기구(유원시설업)와 PC기반 VR게임(PC게임제공업 등) 공간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 설치 필요 → 공간 활용에 제약 수용 기존 유원시설업(VR시뮬레이터)에 PC기반의 VR게임 등 PC게임업이 입점할 경우 업종간 차단벽 등 설치 제외 |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 | '18.12월 '19.6월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2 | VR체험시설내 다양한 재질의 칸막이 설치 허용 (문체부) | 애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칸막이로 "투명유리창 등"을 설치 가능하나, 허가 과정에서는 "투명유리창*"만 설치토록 요구 * 센서 오작동, 고비용 강화유리 설치비용 부담 수용 VR체험시설 내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칸막이 허용 | 우선시행 후 '게임산업법 시행령' 개정 | '18.12월 ※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('18.4.) |
| 13 | VR시뮬레이터의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 명확화 (문체부) | 애로 안전성검사 비대상(확인검사 대상) VR시뮬레이터임에도 검사대행업체에서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분류하는 사례 발생 수용 안전성 검사대상 해당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|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및 유원시설 안전 정보망 보완 | '18.6월 완료 |
| 14 | 온라인·모바일게임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 (문체부) | 애로 온라인·모바일 게임에 대한 명확한 행정 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어 "오락실"과 동일 기준 적용 수용 온라인·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범위별(전부 영업정지, 일부 영업정지 등)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마련 |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※ 게임산업법 개정(현재 국회심의중, '19.上. 개정 예상) 후 조치 가능 | '19.9월 |
| 15 | 게임관련 규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(문체부) | 애로 규정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 (허가취소, 영업정지 등) 부과 특히, 모바일게임에 영업정지(모든게임) 처분은 치명적 대안 마련 온라인·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범위별(전부영업정지, 일부 영업정지 등)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마련 |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※ 게임산업법 개정(현재 국회심의중, '19.上. 개정 예상) 후 조치 가능 | '19.9월 |
| 16 | VR시뮬레이터 관련 등급심의 출장심사 확대(문체부) | 애로 VR시뮬레이터(HW)와 연동되는 게임 등급심의 시 덩치가 큰 HW도 함께 제출 등급심의와 관련하여 출장 심의를 적극적으로 운영 기 조치 *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출장심사 확대 실시 중 |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 | '16.11월 완료 |

2. ICT융합 분과

나. 첨단제조로봇 (과제 17~18)

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7 | 첨단제조로봇 작업장 안전보호 장치 설치기준 완화 (고용부) | 애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 매트와 방책(fence)을 모두 설치토록 규정 수용 방책(fence)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,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광선커튼(Light Curtain), 레이저 스캐너 등 다양한 안전보호 장치 대안 허용 |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| '18.8월 완료 |
| 18 | 협동로봇시스템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면제 기준·절차 마련 (산업부) | 애로 협동로봇 작업장의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기관, 절차, 기준 부재 수용 국내 인증기관의 '협동로봇 설치 인증 체계' 마련 추진 | 협동로봇 설치 인증 세부절차 마련 * 부처 기발표 | '18.6월 완료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. ICT융합 분과 | | 다. 스마트러닝 (과제 19~20) | | |
| 19 | K-MOOC 활성화 위한 학점 인정 확대 (교육부) | <p>애로 대학에서 개설한 K-MOOC 강좌를 이수할 경우, 대학생은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하나, 일반인은 '학점은행제' 학점으로 인정 불가</p> <p>수용 대학에서 개설한 K-MOOC 강좌에 대해 일반인이 '학점은행제'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</p> | <p>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</p> <p>* 부처 기발표</p> | '18.11월 완료 |
| 20 | 학교내 학습 콘텐츠용 무선망 보안 기준 완화 (교육부) | <p>애로 단순 학습교재 다운로드 목적으로 운영되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규제가 높음</p> <p>수용 무선인터넷을 교수·학습 목적으로 사용 시 최소한의 보안수준만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</p> | <p>우선시행 후 '정보보안 기본지침' 개정</p> | '18.12월 ※ 규정개정전 우선시행 ('18.6.) |
| 2. ICT융합 분과 | | 라. 기타 (과제 21~25) | | |
| 21 | 소방시설에 대한 전자이력 관리 근거 마련 (소방청) | <p>애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, 기록관리, 제출 방법 등이 수기방식으로만 되어 있음</p> <p>수용 수기와 전자적 방식을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</p> | <p>소방시설법 시행규칙, 소방시설 자체 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</p> | '18.12월 |
| 22 |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본인확인기관에 CI생성모듈 제공 (방통위) | <p>애로 본인확인기관에 CI(주민번호 대체 정보) 생성모듈 제공 여부가 명확치 않으며, 본인 확인기관 진입장벽(자본금 요건 80억원)이 높음</p> <p>수용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, CI생성모듈 보유를 희망할 경우 제공</p> <p>* 자본금 80억원 등 지정요건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검토</p> | <p>CI생성모듈 제공에 대한 명확한 해석</p> <p>※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(중장기)</p> | '18.5월 완료 |
| 23 | 스마트팜 ICT융합 제품 인증기준 마련 (농식품부) | <p>애로 무선방식의 스마트팜 ICT장비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개발제품의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</p> <p>수용 현재 표준규격이 없는 신제품인 스마트팜 ICT장비(토양수분센서)에 대해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제품성능확인 기준·절차 마련</p> | <p>토양수분센서 검·인증 제도 마련</p> | '19.6월 |
| 24 | IoT 플랫폼 제품에 대한 '성능인증 적합성 심사기준' 마련 (중기부) | <p>애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IoT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받기 어려움</p> <p>수용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한 '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' 개선</p> | <p>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(고시) 개정</p> | '18.12월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--------|
| 25 | 로봇기술 등 국유특허 기술거래 시 온라인 거래 허용 (특허청) | <p>애로 국유특허 기술거래 시 기업이 기술거래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</p> <p>수용 온라인을 통한 국유 특허 기술거래 허용</p> | <p>국유특허권 처분·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</p> <p>* 부처 기발표</p> | '18.12월 |
| 3. 바이오헬스 분과 가. 제약바이오 (과제26~32) | | | | |
| 26 |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(제조사)에게 제공 (복지부) | <p>애로 안전성·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회수의무자(제조사)가 해당 의약품의 정확한 유통·공급 현황 파악 곤란</p> <p>수용 심평원(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)이 보유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제공</p> | 행정조치 | '18.7월 완료 |
| 27 |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 등 사전검토 회의록 제공 (식약처) | <p>애로 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시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만 발급 → 신청인과 부처 간 논의되고 합의된 세부내용이 없어 해외 수출 대상국에 설명자료로 활용 불가</p> <p>수용 사전 검토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공식회의록(국문) 제공</p> | 행정조치 | '18.6월 완료 |
| 28 | 주요 선진국에서 시판중인 일반 의약품의 안전성·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확대 (식약처) | <p>애로 수입 일반의약품의 경우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경우만 안전성·유효성 심사 면제</p> <p>대안 마련 일반의약품 자료 제출 범위 합리화 등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제도 개선</p> | 의약품의 품목 허가·신고·심사 규칙(고시) 개정 | '19.2월 |
| 29 | '원료의약품 등록 의무' 대상에서 주사제 의약품 원료 제외 (식약처) | <p>애로 신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주사제는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필요 → 등록 저조*로 신규 주사제 개발에 애로 * 해외 실사 비용 과다 등으로 5개 성분만 등록('18.3월)</p> <p>대안 마련 치료에 필수적인 성분 등을 고려하여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</p> | 원료 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(고시) 개정 | '18.8월 완료 |
| 30 | 유일한 대체 약제의 품질수급 불안정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 (복지부) | <p>애로 대체약제의 생산중단이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협상과정에서 고려 안됨</p> <p>대안 마련 '유일한 대체약제 품질이나 수급 불안정' 등 특수한 경우 해당 약제가 사용약가 협상 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</p> | 행정조치 | '18.9월 완료 |
| 31 | 품목 허가받은 '유전자치료제'의 치료기관 신고와 환자서면 동의 면제 (복지부) | <p>애로 치료기관 신고 및 환자 서면동이는 병원의 사용 확대 여건 제한 및 환자의 부정적 인식 확대 우려</p> <p>대안 마련 온라인 시스템 활용 등 신고·동의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</p> | 행정조치 (시스템 구축) | '19.3월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32 | 최초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 후 조사(사용성적조사) 수행 시 업체 공동실시 허용 (식약처) | <p>애로 신약 시판 후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가 조사 미이행시, 최초 허가된 제네릭 의약품 업체는 독점 판매 혜택없이 조사 의무만 부여</p> <p>기 조치 동일 품목을 허가받은 업체 등이 공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기조치</p> | 시판 후 약물감시 업무가이드라인 (민원인안내서) 마련 | '12.7월 완료 |
| 3. 바이오헬스 분과 나. 의료기기 (과제33~40) | | | | |
| 33 | 의료기기 첨부문서(제품설명서) 인터넷 제공 대상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(식약처) | <p>애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범위가 모호(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), 의료기기 등급별 연차적 시행*으로 개선효과 체감도 저하 우려 * 4등급('19.1월) ~ 1등급('22.1월)</p> <p>수용 인터넷만으로도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 최대화 및 등급별 차등없이 일괄 시행</p> | <p>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</p> <p>고시 제정</p> | '19.7월 '19.4월 |
| 34 | 인·허가를 득한 원천기술 의료기기 임시급여제 도입 (식약처, 복지부) | <p>애로 세계 최초 원천기술로 개발한 의료기기가 품목 신설 지연으로 치료재료 수가 산정을 받지 못해 국내·외 판매에 지장</p> <p>수용 의료기기 품목 신설 및 치료 효과성에 대한 근거 확보가 가능토록 선별급여 적용</p> | <p>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(고시) 개정</p> <p>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고시) 개정</p> | '18.10월 '18.12월 |
| 35 | 백내장(질병군 포괄수가)과 녹내장(행위별 수가) 동시 수술시 녹내장 수술 치료재료 별도산정 인정 (복지부) | <p>애로 동시 수술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안되어 두 번의 수술로 인한 수술 부작용과 비용 부담 증가</p> <p>수용 질병군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백내장 수정체 양안 수술시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별도 산정 인정 *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적용 제외</p> |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고시) 개정 | '18.8월 완료 |
| 36 | 이동형 CT(전산화단층촬영장치)의 사용장소 확대 (복지부) | <p>애로 수술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중환자실, 응급실, 특수앰불런스 등에서 사용 불가</p> <p>대안 마련 의료기관 종사자, 환자, 일반인 등에 대한 피폭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대 방안 검토</p> |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| '19.4월 |
| 37 |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, 안전교육 등 중복 규제 개선 (과기정통부) | <p>애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(식약처) 외에 3D프린팅 사업 별도 신고(과기정통부), 종사자 안전교육 등 중복</p> <p>대안 마련 의료기기 등 개별법에서 관리되는 경우 사업신고 등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</p> | 삼차원 프린팅 산업진흥법 개정 | '19.6월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38 |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마련 (식약처) | 애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관련 국제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수용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* 가이드라인 마련 * 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) :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| 가이드라인 제정 * 부처 기발표 | '18.12월 |
| 39 | 위험물안전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기기 제외 (소방청) | 애로 체외진단용 시약 등 의료기기 취급 업체에 위험물 판정시험 결과 요구 대안 마련 판정시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기준 마련, 판정시험을 받은 위험물의 범위· 시험결과 등의 정보 공개 | 행정조치 | '18.6월 완료 |
| 40 | 기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사항 변경시 전기안전 고사(3.1판) 적용 완화 (식약처) | 애로 2판으로 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중대한 변경시 기준이 강화된 3.1판이 적용 대안 마련 3.1판 적용이 필수적인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사례를 업계 및 관계 기관에 배포 | 가이드라인 발간 * 부처 기발표 | '18.8월 완료 |

3. 바이오헬스 분과

다. 스마트헬스/ 바이오의약품 (과제 41~44)

| | | | | |
|----|---|--|---|--|
| 41 |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시 사용되는 정보보호 제품에 CC인증 외 다양한 인증 수단 허용 (복지부) | 애로 진료정보 외부보관 시 CC인증* 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 * (공통평가기준, Common Criteria) IT 제품이나 특정 사이트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정보 보안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 수용 CC인증 외 타 인증을 받은 제품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* 국제 또는 국내 인증제품 허용('18.10.4.시행), 인증수단 확대 방안 추가 검토 | 전자의무기록의 관리·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개정 | '19.6월 ※ 국제 또는 국내 인증제품 허용 ('18.10월) |
| 42 |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합리적 개선 (환경부) | 애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업종에 포함되어 동일한 감축률(15%) 적용 대안 마련 제2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업종간 형평성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부문별 또는 업종별 할당방식 등 대안 마련 |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할당 계획 수립 * 부처 기발표 | '18.7월 완료 |
| 43 | 경구투여용 유전자치료제 기준 및 시험방법 완화 (식약처) | 애로 유전자치료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주사제형 위주로 설정, 다른 제형 특성에 맞는 기준과 시험방법 미반영으로 시간·비용 부담 대안 마련 경구투여용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무균시험이 불필요함을 명확하게 안내 | 첨단바이오 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자료집 개정 | '18.12월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|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44 | 스마트 의료기기의 중복 시험인증 제도 개선 (과기정통부) | 애로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인증과 무선 적합성 인증시 유사 중복 항목으로 시간·비용 부담 기 조치 의료기기 관련 중복되는 검사는 관련 법령 정비로 기 조치 |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및 전자파 보호기준 개정(고시) | '15.2월 완료 |
| 3. 바이오헬스 분과 라. 화장품/ 건강기능식품 (과제 45~48) | | | | |
| 45 | 유통·판매 후에도 화장품 원료 목록보고 허용 (식약처) | 애로 전 품목별 유통·판매 전 원료 목록보고 의무로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 및 영업기밀 유출 우려 대안 마련 기업의 보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료 목록 보고시스템 개선, 보고된 정보가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규정 마련 | 보고 시스템 개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| '19.3월 '19.9월 |
| 46 |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주성분 신속심사제 도입 (식약처) | 애로 기능성 화장품 효능·효과 심사기간(60일)이 길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에 애로 대안 마련 고시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제외 대상(보고대상) 품목 확대 |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| '19.9월 |
| 47 | 단일·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법 통합 (식약처) | 애로 미백, 주름개선 등 이중 기능성 화장품과 단일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방법이 달라 시간·비용 부담 가중 수용 이중 기능성화장품과 단일 기능성 화장품의 시험방법 통합 |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(고시) 개정 | '18.12월 |
| 48 |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물질 개발시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확대 (식약처) | 애로 현재 혈압 등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기준이 정상인에 가깝게 설정 →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어려워 시간·비용 손실 발생 수용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확대 방안 마련 |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가이드 개정 | '19.6월 |
| 4. 에너지신소재 분과 가. 친환경자동차(수소차) (과제 49~58) | | | | |
| 49 |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이동식 허용 (산업부) | 애로 고정식 수소충전소 외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·운영 기준 부재 수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허가기준 특례 마련 | 융복합,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(고시) 개정 | '18.10월 완료 |
| 50 |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(산업부) | 애로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되었음에도 충전압력·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 → 사업성 저하 수용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최고 충전압력(35→45Mpa) 및 내용적(150→360L) 상향 | 가칭 "KGS AC419 (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검사기준)" 제정 | '19.3월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|--|--|---|------------------|
| 51 |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(산업부) | <p>애로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법령 부재로 국내 실증·상용화 곤란</p> <p>수용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시 액화수소기준 우선 도입</p> <p>* 고정형 충전소에 대한 액화수소 기준은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, 중장기 검토</p> | 융복합,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(고시) 개정 | '18.10월 완료 |
| 52 | 수소자동차 부품 인증기준 개선 (국토부) | <p>애로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기준 차이로 이중개발 부담</p> <p>* 국내 9종, 북미 15종, 유럽 13종 등</p> <p>수용 국제기준 심층분석 및 내압용기·자동차 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</p> |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| '19.12월 |
| 53 | 준주거 및 상업 지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(국토부) | <p>애로 준주거·상업지역 내는 수소충전소(고압가스제조) 설치 불가 → 충전 불편</p> <p>수용 준주거·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('19.6월)</p> <p>* 조례로 설치 허용 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, 시·군)</p>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| '19.6월 |
| 54 |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(국토부) | <p>애로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·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는 설치 불가(수소충전소 단독 설치 가능)</p> <p>수용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·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</p> |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| '18.12월 |
| 55 | 수소충전소 설치시 철도로부터 30m 이격거리 완화 (산업부) | <p>애로 수소충전소 구축시 철도로부터 30m 이격거리 유지 필요 → 부지확보에 애로(기 구축된 LPG 충전소*에 융복합 형태로 설치 곤란)</p> <p>* LPG 충전소의 경우 철도와의 이격거리 기준 없음</p> <p>대안 마련 연구용역('18.9~12월)을 통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안전성 검증 후 규제 완화방안 검토</p> |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| '19.3월 |
| 56 |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(50m)를 CNG충전소(25m)와 동일하게 개정 (국토부) | <p>애로 이격거리 차이로 인해 시내버스 차고지 내 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복합 설치 곤란</p> <p>대안 마련 기존 공동주택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 (유권해석)</p> | 행정조치 | 유권해석 요청 시 명확히 안내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57 | 수소충전소 (3,000m ³ 초과)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없이 설치 허용 (국토부) | 애로 3,000m ³ 초과*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 시설(가스공급설비)로 결정·설치 필요 → 절차이행**에 최소 5개월 ~ 1년 소요 * 3,000m ³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** 도시계획 결정 → 시행자 지정 → 실시 계획인가 수용 3,000m ³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허용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| '19.6월 |
| 58 | 수소차 운전자 셀프 충전 허용 (산업부) | 애로 현재 충전소에 고용되어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원만 충전 가능* * 안전교육(신규종사시 1회, 5시간) → LPG·CNG도 수소와 동일 대안 마련 연구용역('18.11~'19.2)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허용방안* 검토 * LPG·CNG 등 유사시설 고용에 미치는 영향,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**추진 방안 검토 ** 수소차량 조건부 허용(1단계), LPG·CNG차량 조건부 허용(2단계), 수소LPG·CNG 차량 전면 허용(3단계) | 행정조치 | '19.3월 |
| 4. 에너지·신소재 분과 나. 친환경자동차(전기차) (과제 59~60) | | | | |
| 59 |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구분 기준 완화(75Kw 이상 : 각 설비합산 → 개개 설비별) (산업부) | 애로 옥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기존 설비와 합해 75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→ 충전기 설치 기피 대안 마련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구분은 건물 전체설비 합산이 아닌 층별 합산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(유권해석) | 행정조치 | '18.11월 |
| 60 |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 사업 허용 (산업부) | 애로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개인 충전기 소유자로부터 충전기를 위탁하여 사업화 가능 여부 불명확 기 조치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개인간 전력판매 형식이 아닌 경우, 충전기 위탁공유 사업 가능 |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'13.3월 완료 |
| 4. 에너지·신소재 분과 다. 친환경자동차(공통) (과제 61~63) | | | | |
| 61 | 성능시험·시범 운행용 친환경 자동차의 배출 가스 인증 생략 가능대수 확대 (환경부) | 애로 인증생략 가능 대수가 50대로 제한되어,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등에 애로 수용 성능시험·시범운행용 친환경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생략 가능 대수 확대 * 기존 50대 →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50대까지 인증생략 가능 |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개정 | '18.8월 완료 |
| 62 |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에 광고 (자사·타사) 허용 (행안부) | 애로 주유소·가스충전소에 대한 자사 옥외광고 규정은 있으나,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옥외광고 규정 미비 수용 전기차 포함 친환경차 충전소에 광고(자사·타사) 허용 |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,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 마련·배포 | '18.12월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63 | 국·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수의계약 허용 (산업부) | 애로 국·공유지 임대시 (재)계약시마다 공개입찰 진행 → 유찰(2회) 후 수의계약 진행 등 행정부담 과다 기 조치 국·공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, 임대료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의원 발의 중 |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| '18.9월 완료 (의원발의) |
| 4. 에너지·신소재 분과 라. 스마트에너지 (과제64~66) | | | | |
| 64 | IoT 전기계량기 형식승인 기준 마련 (산업부) | 애로 IoT 전기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사용하기 위한 인증기준(형식승인) 미비 대안 마련 IoT 융복합 전력량계의 형식 승인 기술 기준 마련(분리형 표시장치도 인정) |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| '18.11월 |
| 65 |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(BEMS) 설치확인 기준 개선 (산업부) | 애로 현행 설치확인기준은 업무용 건물이 주 대상으로 학교 등 타 용도 건물에 적용이 어렵고 수요처별 모니터링 관제점 기준도 과다 대안 마련 KS표준 제정 작업과 연계하여 BEMS 설치확인 기준 개선 예정으로 그 과정에서 건의 내용 반영·검토 |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개정 | '18.12월 |
| 66 |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(BEMS) 활성화를 위한 냉·난방설비 프로토콜 공개 등 제도개선 (산업부) | 애로 냉난방 설비 제어기술이 설비제조사와 그 자회사 중심으로 공유되어, 중소기업의 BEMS 시장 진입 제한 대안 마련 다양한 프로토콜을 BEMS시스템과 연계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BEMS 플랫폼 개발 및 보급 추진(국토부 협조) | 행정조치 | '18.12월 |
| 4. 에너지·신소재 분과 마. 태양에너지 (과제67~71) | | | | |
| 67 |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 (산업부) | 애로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각각 진행되어 시간적, 금전적 손실 발생 수용 용량 3MW이하인 발전시설에 대하여 발전사업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처리 | 전기사업법 개정 * 부처 기발표 | '19.6월 |
| 68 | 자전거 도로의 지붕없는 구조물에 태양광 설치시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인정 (산업부) | 애로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설치시 지붕이 있는 지상구조물에 설치한 경우만 최대 REC 가중치* 적용 * 설치용량 100Kw ~ 3,000Kw 기준 : 지붕 有 (1.5), 지붕 無(1.0) 수용 지붕 유무와 상관없이 자전거 도로에 설치시 최대 가중치 적용 |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| '18.6월 완료 |
| 69 | 초지법 전용허가 대상에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 추가 (농식품부) | 애로 초지내 인공구조물 설치를 위한 전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외 대안 마련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 한하여 자신의 땅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하도록 법률 제정 |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(가칭) 제정 | '18.12월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|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70 | 수상태양광 발주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(환경부·농식품부) | <p>애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의 참여 기회 제한</p> <p>대안 마련 태양광발전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</p> | <p>행정조치 (담, 저수지 활용계획 수립)</p> <p>* 담 : '19.12월 저수지: '18.12월</p> <p>* 부처 기발표 (환경부)</p> | '19.12월 |
| 71 | 지자체별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 기준 설정은 조례로만 허용 (국토부) | <p>애로 지자체 자체 지침에 의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보급 애로</p> <p>기 조치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마련시 조례로만 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</p> | <p>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개정</p> | '18.4월 완료 |
| 4. 에너지·신소재 분과 바. 바이오에너지 (과제 72~75) | | | | |
| 72 | 국내산 원목 활용 발전 연료에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적용 (산업부) | <p>애로 국내산 원목으로 제조한 발전연료에는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미부여</p> <p>수용 국내산 원목 활용 연료에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부여</p> | <p>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</p> | '18.6월 완료 |
| 73 | 흑액 활용 바이오에너지 발전에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적용 (산업부·산림청) | <p>애로 유통단계 없이 자가 생산·소비되는 흑액은 품질기준 부재로 REC 가중치 적용 제외</p> <p>대안 마련 펄프 흑액의 규격 및 품질기준 마련, 바이오 에너지 연구용역을 통해 '흑액'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 여부 검토</p> | <p>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</p> <p>흑액의 품질기준(고시) 제정</p> | '19.6월 '18.12월 |
| 74 |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목재 펄릿·목재칩 품질규격 개선 (산림청) | <p>애로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, 품질기준 등이 국제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생산·품질관리에 애로</p> <p>수용 목재펠릿·목재칩의 규격·품질 기준을 국제표준(ISO) 기준에 맞도록 개선</p> | <p>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고시 개정</p> | '19.6월 |
| 75 |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의 규격·품질인증 표시 위반업체 행정처분제도 신설 (산림청) | <p>애로 1년 1회 시료분석만으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</p> <p>대안 마련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 등 단계적인 조치 도입 방안 검토</p> | <p>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</p> | '19.9월 |
| 4. 에너지·신소재 분과 사. 기타 (과제 76~77) | | | | |
| 76 |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비 설치완료 점검 확인 신속시행 (산업부) | <p>애로 점검기관의 설치완료 확인 지연 →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조달에 애로</p> <p>기 조치 '17년부터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처리 기한을 분리·운영→신청 집중시기에도 점검기간내 확인 완료</p> | <p>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</p> | '17.2월 완료 |

| 연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 조치사항 | 완료시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------|
| 77 |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부여 대상 전력저장 장치(ESS)용 이차전지 범위 확대 (산업부) | <p>애로 "리튬 이차전지" 방식의 ESS에만 REC 가중치 부여</p> <p>대안 마련 RPS 제도개선 정책연구를 통해 KS인증대상 ESS설비(레독스흐름 이차전지 등)에 대한 가중치 부여 여부 검토</p> | 행정조치 | '19.6월 |
| 5. 신서비스 분과 가. 020 (과제 78~79) | | | | |
| 78 | O2O 서비스 공급자는 통신판매업 규제 적용 제외 (공정위) | <p>애로 Off-Line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외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등 전자상거래법상 각종 의무가 중복적 부담</p> <p>대안 마련 '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이후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중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법령 정비여부를 결정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</p> | 전자상거래법 개정 * 부처 기발표 | '18.12월 |
| 79 | O2O 가사대행 서비스 제공자의 범죄경력 조회 허용 (고용부) | <p>애로 O2O 기업이 가사도우미에게 범죄경력 제출 요구 및 직접 조회 불가</p> <p>대안 마련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후 '아이돌봄 지원법'상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아이돌봄 업무도 같이 하는 가사근로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마련 추진</p> | 가사근로자법 개정 ※ 가사근로자법 제정 후 조치 가능 (현재 의원발의 중) | '19.12월 |
| 5. 신서비스 분과 나. 기타 (과제 80~82) | | | | |
| 80 | 국가관리 자동차 DB정보 일부 (유종) 공개 (국토부) | <p>애로 차량등록증 정보(차량번호, 유종 등) 비공개로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 불가</p> <p>수용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</p> | 자동차 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| '19.3월 |
| 81 | 2차원의 주소 부여 체계를 3차원 체계로 전환 (행안부) | <p>애로 주소 부여 범위가 지표면의 도로와 건물에 한정 → 드론,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의 Door to Door 서비스 구현에 한계</p> <p>수용 지상·지하 차도, 대형건물 내부 및 건물이 아닌 장소(공터, 농지 등)에도 주소 부여</p> | 도로명주소법 개정 * 부처 기발표 | '18.12월 |
| 82 |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모집한도 확대 (금융위) | <p>애로 개인투자자 한도액은 증가하였으나 연간 모집한도(7억원) 제한으로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에 애로</p> <p>수용 클라우드펀딩 연간 발행(모집) 한도를 현재(7억원)의 2배 이상(15억원)으로 확대</p>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* 부처 기발표 | '19.6월 |

□ 규제준치 과제(12건)

| 연 번 | 건의 과제 | 검토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1 무인이동체 분과 | | |
| 1 | 무인비행장치 비행 승인기간 및 항공촬영 승인기간 연장 (국토부,국방부) | 현재 설정된 승인기간은 적정하며 국민 안전, 국가안보 등을 위해 규제 준치 필요 |
| 2 | 드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검사설비 보유 요건 삭제 (중기부) | 현재의 검사설비 보유요건도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과한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|
| 2. 바이오헬스 분과 | | |
| 3 | 국내제약사가 설립한 해외 제조소에 전 공정 위탁제조 허용 (식약처) | 제조/수입 구분 체계하 전 공정 위탁제품을 국내 제품품목으로 인정 곤란, 국내 제조업체의 투자이익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우려 |
| 4 | 의료전문가 대상 마약류 정보전달 방법을 '전문 의약품' 수준으로 확대 (식약처) | 사회적 오·남용 문제로 인한 국민생명·안전 위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제준치 인정 |
| 5 | 혈장분획제제 복합제를 퇴장 방지의약품으로 지정(복지부) |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퇴장 방지의약품 지정·관리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아 제외(단일제도 제외 예정) |
| 6 | 의약외품인 치약제품을 화장품류로 분류 (식약처) | 현행 법체계, 화장품의 정의,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준치 인정 |
| 7 | 콧속 마스크 의약외품 등록기준 신설 (식약처) | 마스크의 호흡기 보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현행 등록기준대로 규제준치 필요성 인정 |
| 3. 에너지·신소재 분과 | | |
| 8 |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(경찰청) | 전기차 운행시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도덕적 해이 유발 등 보편적 국민정서를 고려 규제준치 타당 |
| 9 | 소용량 자가용 신재생발전설비 사용전 검사 간소화 (산업부) | 부실공사 예방 및 연계된 전력시설물의 안전을 고려 현행 규제 유지 필요 |
| 10 | 수소충전소를 상대보호구역 (학교에서 200m)내설치 허용 (교육부) | LPG 충전소 등 유사시설과의 규제형평성,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현행 유지(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) 필요 |
| 11 | 수소차 용기 인증시 충격시험 제외 (국토부) | 해외 수출을 위해 충격시험이 필요하며, 제외여부는 해외기준의 개정추이를 고려하여 결정 |
| 12 | 소규모 전기이륜차 제작사의 자기인증 능력 기준 완화 (국토부) | 현행 자기인증능력 기준은 국제 기준 등에 따라 규정한 것이며, 기준 완화시 부적격업체 난립에 따른 안전성 저하 등 소비자 피해 우려 |

□ 완료과제 48건(후속조치 필요과제 61건 기준)

| 연번 | 과제명 | 이행조치 | 시행일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◆ 신사업 출현 및 신시장 창출 [19건] | | | | |
| 1 | 작업자 체류시에도 협동로봇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 | 위험기계·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| '17.10.29. | 고용부 |
| 2 |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 | 금융투자업규정(고시) | '18.6.29. (6개월 단축) | 금융위 |
| 3 |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 신설 |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(고시)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(고시) | '18.1.4. '18.6.26. | 산림청 산업부 |
| 4 | 고해상도(25cm급) 항공사진 공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|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(훈령) | '17.12.28. | 국토부 |
| 5 |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(DTC)의 소비자 광고 허용 | 유권해석(행정조치) | '17.5.1. (1개월 단축) | 복지부 |
| 6 |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| 농지법 시행령 | '18.5.1. (1개월 단축) | 농식품부 |
| 7 |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 유지기간 예외 인정 |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(훈령) | '17.12.29. | 국토부 |
| 8 | 순수목질계인 임목폐목재 등 임목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|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규정(고시) | '18.8.14 | 산림청 |
| 9 |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에 대해 REC 가중치 적용 |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(고시) | '18.6.26. | 산림청 산업부 |
| 10 | 벌채지에서 발생한 미이용 임목 부산물 수집 의무화 |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(고시) | '18.6.26. | 산림청 (산업부) |
| 11 |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지정 |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'18.5.28. | 산림청 |
| 12 | 조림 시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조림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|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(고시) | '18.6.26. | 산림청 (산업부) |
| 13 |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시 일반인 탑승 가능여부 명확화 | 유권해석 및 공문시달(행정조치) | '17.12.26. | 국토부 |

| 연번 | 과제명 | 이행조치 | 시행일 | 소관부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4 | 재활로봇의 성능에 따른 수가 적정화 | 해외 건강보험 등재 사례 검토 | '18.6.1. | 복지부 |
| 15 | 자율주행차 관련 위치정보보호 기준 마련 |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| '18.4.17. (3개월 단축) | 방통위 |
| 16 |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| 정보통신망법 | 과제종결 ('18.9.6.) | 방통위 |
| 17 |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| 전자서명법 | '18.9월 (국회제출) (3개월 단축) | 과기 정통부 |
| 18 |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대상에 정부·지자체도 포함 | 클라우드컴퓨팅법 | '18.6월 (의원발의) (6개월 단축) | 행안부 과기정통부 |
| 19 |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) 유전자 패널검사의 비의료기관 위탁 허용 | 비의료기관 위탁 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논의 실시 및 미국식 CLIA법 등 법령 제·개정 등 검토 | 과제종결 ('18.8.30) | 복지부 |
| ◆ 신기술 개발 촉진 [2건] | | | | |
| 20 |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인 라이다(LiDAR) 센서 장착 허용 | 도로교통법 | '18.3.27. | 경찰청 |
| 21 |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보험수가 코드 간 연계 보완-콜라겐 지혈제 |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고시) | '17.10.31. | 복지부 |
| ◆ 기업애로 해소 [27] | | | | |
| 22 |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| 공문시달(행정조치) | '17.12.15. | 국토부 |
| 23 |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 간소화 | 표준통관예정 시스템 개선(행정조치) | '17.7.27. | 식약처 |
| 24 |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재발급 사유 확대 | 의료기기법 시행규칙(총리령) | '18.6.14. | 식약처 |
| 25 | 임상시험 신규 종사자에 대한 상시 교육 여건 마련 |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(고시) | '17.10.20. | 식약처 |
| 26 |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변경심사 수수료 합리화 | 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(고시) | '17.7.10. | 식약처 |
| 27 |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|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(고시) | '17.7.31. | 복지부 |
| 28 | 의료기기(치료재료) 요양급여 결정의 법정처리기한 준수 | 행위·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(고시) | '18.3.29. | 복지부 |
| 29 |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비급여 수가 산정 절차 개선 | 요양급여 결정신청 위한 제출서류 타당성 여부 검토(행정조치) | '17.12월 | 복지부 |

| 연번 | 과제명 | 이행조치 | 시행일 | 소관부처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30 |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의 국유림내 설치 허용 |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(훈령) | '17.12.29. | 산림청 |
| 31 | 정보보호준비도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 ISMS인증 취득기간 1년 유예 |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(행정조치) | '18.2.6. | 과기정통부 |
| 32 | ISMS인증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| 수요가 적은 시기에 미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(행정조치) | '18.2.6. | 과기정통부 |
| 33 | 소형무인기 전용구역 일반사업자에게도 사용 허용 | 신청승인(행정조치) | '17.9.29. | 국토부 |
| 34 | 포괄수가제 수술군에 신의료기술 활용 촉진 | 위원회 회의결과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(행정조치) | '17.12.8. | 복지부 |
| 35 | 의료분야 3D 프린팅 관련 전문가 관리제도 마련 | 교육과정(3D프린팅 전문가 양성 과정 등) 개설(행정조치) | '17.4.27. | 식약처 |
| 36 | 국산 재활로봇의 공공조달 진입 촉진 | 공문안내(행정조치) | '17.7.5. '17.7.5. '17.10.19. (2~5개월 단축) | 조달청 행안부 기재부 |
| 37 | 재활로봇의 사용적합성(IEC 62366-1) Test 수행기관 확대 | 사용적합성 테스트 수행기관 추가 확대 완료(1개소)(행정조치) | '18.3.5. (3개월 단축) | 복지부 |
| 38 |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(GMP) 적용시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 명확화 |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규정(고시) | '18.7.3. | 환경부 |
| 39 |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에 연구중심 병원 포함 |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| '18.5.8. (1개월 단축) | 과기정통부 |
| 40 | 공공발주 시 발주기관의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 공고 |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예규) | '17.12.28. '18.7.9. | 기재부 행안부 |
| 41 | 정부연구지원 대상 발전설비의 REC 정부 환수 비율 합리화 |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규칙) | '18.6.29. | 산업부 |
| 42 | 지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 시 기술인력 평가항목 개선 |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예규) | '18.1.1. | 행안부 |
| 43 | 자율적으로 ISMS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인증심사 일부생략 제도 적용 |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| '18.11.7. (1개월 단축) | 과기정통부 |
| 44 | 온라인상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 게시의무 완화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| '18.6.29. | 산업부 |
| 45 | 유사 정보보호인증 제도간 통합 |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| '18.11.7. (1개월 단축) | 과기정통부 |

| 연번 | 과제명 | 이행조치 | 시행일 | 소관부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
| 46 |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의 콜버스 운영 허용 | 콜버스 차량확대 방안 | 과제종결 ('18.8.28.) | 국토부 |
| 47 | OECD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 기준(GLP) 자료 상호인정 확대 | 행정조치 | 과제종결 ('18.8.30.) | 식약처 |
| 48 |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에 국가핵심기술 이전 신고 시 행정절차 간소화 | 국가핵심기술기준(고시), 신고절차간소화(행정절차) | '18.9.7. | 산업부 |

□ 진행중인 과제 13건(후속조치 필요과제 61건 기준)

| 연번 | 과제명 | 이행조치 | 목표시한 | 소관부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태양광·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축소(2km 이내) |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| '18.12. (연구용역중) | 산업부 |
| 2 | 순수 목재펠릿과 폐목질계 Bio-SRF와의 차별화 위한 제도개선 | 자원재활용법 | '18.12. (의견수렴중) | 환경부 |
| 3 | 연료전지 발전관련 지방세 과세분류 체계 명확화 | 지방세법 | '19.12. (연구용역중) | 행안부 산업부 |
| 4 | 디지털교과서 검정기간 단축 |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| '18.12. (내부검토중) | 교육부 |
| 5 | 풍력발전단지 설치관련 제도 개선 |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생태자연도 작성지침(예규) | '18.12. (입법절차중) | 환경부 |
| 6 |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(DTC)항목 확대 | 생명윤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,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(고시) | '18.10. (국생위 추가 논의중) | 복지부 |
| 7 | 직류용 에너지저장장치(ESS)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적용 | 전력량계 기술기준(고시), 한전전기공급시행세칙 | '18.12. (입법절차중) | 산업부 |
| 8 | 일반 농지내 농지전용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| 연구과제 후 확대 시행여부 검토 | '19.12. (시범사업중) | 농식품부 |
| 9 |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| 연구용역 후 허용여부 검토 | '18.10. (연구용역 후 내부검토 중) | 복지부 |
| 10 |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| 공공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등 개정 검토 | '18.12. (방안마련중) | 행안부 |
| 11 | 3D 프린팅 안전교육 시 온라인 교육 허용 | 보수교육 온라인교육 추진을 위한 교재 콘텐츠 개발(인프라구축) | '19.11. (개발진행중) | 과기정통부 |
| 12 | 조력발전소에 대한 REC 거래제한 해제 | 연구용역 후 법령개정 검토 | '18.12. (연구용역중) | 산업부 |
| 13 | 상업용 소형무인기 보험제도 개선 | 연구용역 | '18.12. (연구용역중) | 국토부 |